文 vs 非文…결선·모바일 투표 도입이 쟁점

막오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룰 전쟁

당원참여 비율·순회투표 방식 등 주자들 첨예 대립
이번주 TF 구성 실무작업 개시…당헌 개정도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면서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거나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등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주장이 나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원참여 비율이나 순회투표 방식 등을 두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 및 당내 대권주자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 경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 경선 룰 논란이 커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더는 논의를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실무 준비에 서서히 돌입하는 모습이다.

특히 현재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장 당헌 개정부터 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각 후보의 대리인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년 초부터는 주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을 둘러싸고 주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당과 주자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에는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제도'도 마련돼 있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문 진영 표가 결집한다면 후발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 측은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겨냥, 모바일 투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전대에서 나타났듯이 모바일 투표가 실시된다면 모바일 지지층을 강력하게 형성한 문 전 대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지지층에서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다, 당 입장에서도 이미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참여가 일반화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당원과 일반 국민 참여비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여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간 갖자는 요청에도 굳이 野3당 찾아가 문전박대 당한 정우택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찾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 야 3당이 당분간 친박(친박근혜)계인 정 원내대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노 원내대표를 찾아갔지만, 다른 당직자들이 나와 "오늘은 돌아가시라. 상황이 바뀌면 얘기하자"며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회 집무실로 찾아갔지만 역시 만나지 못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정우택(오른쪽 두번째) 신임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취임인사를 하려다 거부당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친박계 원내 지도부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野 거센 압박에 황교안 "20~21일 대정부질문 출석" 민주·국민의당 "늦었지만 다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출석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정부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은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촛불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회 본회의 출석을 결정해 다행"이라며 "국회에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운영 방안을 들고 올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무책임한 선동으로 정치혐오 증폭"

국민의당 연일 '혁명' 발언 문재인 前 대표 때리기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시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대해 수위를 높여가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개헌에 반대하면서 혁명은 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적 모순도 아랑곳하지 않는 선동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사회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며 "문 전 대표는 무책임한 반(反)정치적 선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반감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하다"면서 "광장의 분노가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핵심간부 연수'에서 "지금 개헌을 하면 모든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표가 개헌하자고만 하면 2~3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학규 "대권 욕심 때문에 개헌 반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개헌 반대론자들에 대해 "이는 대권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또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안철수 개인의 지지세는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크게 유효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세력과 패권 세력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담은 게 안철수 현상"이라며 "그 현상은 3~4년 전 유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으며 그것이 촛불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정치는 물론 재벌과 검찰을 개혁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확장하는 개혁의 내용에 합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개혁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세력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그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 세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득권 세력과 패권 세력을 제외하면 연대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신년이 되면 정치적인 큰바람이 불게 되는 데 그때 개혁세력이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라며 "정당의 형태도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위증교사 의혹에…국정조사특위 파행

野3당 위원 대거 불참…이만희·이완영 위원 교체 요구

새누리당 이만희·이완영 의원의 '의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야 3당 소속 특위위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개회된 이날 긴급전체회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위원들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소집된 것"이라며 "동의한 바 없다"고 성명서를 내고 대거 불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여당과 야당의 일부 위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고 야당은 의혹 대상인 두 의원의 교체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앞서 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황영철·장제원·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김성태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해명을 듣고, 관련 증인들을 오는 22일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불러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해명되지 않으면 두 의원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4일 고교 동문인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소유이고, JTBC가 이 PC를 절도했다'는 내용으로 박 과장에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모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매매가 2억 7천만
동구 산수동 / 2층 / 대지 35평 건물 32평 / 55m 도로접

경매
- 골프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룸 / 중마초등학교 서측
-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 상가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
- 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매매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 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